

## [지선 D-30]경남도지사...김경수·박완수 전·현직 대결

등록 2026.05.03 09:00:00 | 수정 2026.05.03 09:12:24



[창원=뉴시스]경남도지사 후보 3인.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민의힘 박완수, 진보당 전희영 후보.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는 여야 3당 후보의 3파전이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58)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71) 후보의 전·현직 도지사 대결에 진보당 전희영(51) 후보가 경남도지사 선거 첫 여성 후보로서 새바람·새정치 실현을 강조하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김 후보가 앞서고 박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어서 최종 승리가 누가 될지에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전 후보가 김 후보와의 연대에 나설지 아니면 완주할지도 관심사다.

선거일 100일을 앞두고 세 후보에게 선거 슬로건과 자신만의 강점, 핵심 공약, 예상되는 선거 이슈에 대해 물었다.

먼저, 선거 슬로건으로 김경수 후보는 '경남대전환, 설계대로 착착', 박완수 후보는 '경남의 대도약! 확실한 도지사!', 전희영 후보는 '부자 경남, 가난한 도민시대 졸업. 일하는 사람들의 내일을 책임집니다!'를 내걸었다.

'자신의 강점'과 관련해 김 후보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점, 지방시대위원장을 하면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든 '5극3특' 지방주도 성장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을 꼽았다.

박 후보는 창원시장, 국회의원, 경남도지사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자 합리적 사고방식의 소유자임을 강점으로 들었다.

전 후보는 50대 초반의 젊고 패기 넘치는 첫 여성 도지사 후보라는 점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위원장, 전교조 전국 위원장 등 사회적 리더 경험을 토대로 새정치를 펼칠 수 있는 참신한 후보임을 강조했다.

'핵심 공약'과 관련, 김 후보는 '경남 대전환'을 위한 1호 공약으로 4대 광역철도망 중심의 부울경 메가시티 30분 생활권 구축 전략과 교통 대전환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경남경제의 위기는 기존 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부울경 전체를 하나의 거대 경제권으로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 즉각 복원이 경남경제 혁신의 첫 번째 과제다"고 강조한 후 메가시티 핵심 기반인 '도시 간 연결'을 위한 4대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박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복지 분야 '행복 UP 5대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 활동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허리에 해당하면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주거 부담을 책임져야 하는 40~50대, 일명 '긴 세대'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 올해 시행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경남도민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시군2를 추진하고, 앞으로 '경남 청년연금', '경남 자녀교육연금', '경남 시니어연금', '경남 마을연금'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 맞는 연금 정책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경남형 일자리보장제' 도입, 지역공공은행 '경남도민은행' 설립, 경남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제시했다.

이는 돌봄·보건의료·기후·농업 분야의 양질 공공일자리를 경남도가 직접 창출하고, 금융자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서부권역의 자연환경과 동부권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결합을 통한 에너지 자급체계 마련, 농어촌 지역 인구소멸 대응 등에 대한 해법이다.

'예상되는 선거 이슈'와 관련해선, 김 후보는 박 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관련한 분명한 입장과 사과 의향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후보는 지난달 27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김 후보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실행에도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후보의 자질 문제를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후보는 경남이 전국 상위권의 총생산을 자랑하는 지역이지만 도민 1인당 개인 소득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전·현직 도지사인 김 후보와 박 후보를 싸잡아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부산 혹은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관련해서도 설전이 예상된다.

김 후보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이 2년 뒤로 미뤄진 점을 두고 박 후보를 공격하고, 박 후보는 김 후보의 메가시티 및 부울경 특별연합 주장에 대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논리로 반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 후보는 행정통합에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자리 문제를 중심에 두고 통합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가칭 '경남부흥균형발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경남도와 기초의회,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 가능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스스로 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